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수완박' 입법 완료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가결'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참여 안해 "민주당 독단적 국회운영에 참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표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까지 처리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정의당 의원 6명이 이번엔 기권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73

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내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지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회기 종료

와 함께 자동 종결됐기 때문에 표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권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하려 하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박 의장은 표결을 마치고 송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부여했다.

송 의원은 "거대정당인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만약 오늘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해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표결을 마친 후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과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 사법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충실하게 보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

안'을 기조로 했다. 중재안은 여야대표 그리고 관련 위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은 본회의 표결 결과에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3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아빠 찬스' 정호영 "도덕적 문제 없다"

청문회 슈퍼워크 2일자

한덕수·정호영·이상민·이종호 4명 정호영 "요구 868건 중 782건 제출 자녀와 관련된 자료, 사생활 문제"

국회가 3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치열한 검증작업을 이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전날(2일)에 이어 이틀째 열렸고 정호영 보건복지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검증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게 이를 연속 '전관예우' 의혹을 따져 물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과 관련해 공직 후에 5년이 지나서 김앤장의 고문으로 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하는데 (취업)제한이 왜 생겼겠냐"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왜 공무원이 (은퇴)한 지 20년 뒤에 (사기업에)갈 수 있게 하지 않고 3년 뒤에 갈 수 있게 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어 한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묻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광화문 시대 열겠다는 공약은 많은 정부가 했다. 정권을 출범해야 하는 시간이 부족한 과정에서 오랫동안 스테디하고 연구했었으나 국민들에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빚다 낙마한 것에 대해선 "상세한 검증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회하자마자 핵심 자료 제출을 두고 후보자와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신현영·고민정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 서류, 아들의 병역 의혹 검증을 위한 MRI(자기공명영상) 영상자료 등 핵심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간 저에게 868

건의 자료가 요구됐고 그 중 782건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 그 중 43건은 곧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녀와 관련된 자료는 성인이 된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을 헤아려 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빠찬스' 등 연이은 의혹으로 낙마 가능성도 제기되던 정 후보자에게 사퇴 의향을 물었으나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정 후보자의 답이 돌아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4명의 증인 불출석과 자료 불성실 제출을 두고 여야 의원이 공방을 벌였다. 또한 이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 인과의 관계를 묻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만나면 형님이라고 했다.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고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미래 국가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정책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과학 정책 비전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 청문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박태홍 기자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구체화

지역균형발전특위, 대국민 보고회 '수도권 쏠림-지방소멸' 근절 목표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세부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권역을 돌며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ODZ)' 등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를 청사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국정 운영 철학은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통한 지역 간 발전격차 수렴과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철학을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 정책은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이러한 상식의 구현이 '정의'로 국정 운영 철학이 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 및 공간적 정의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을 추구한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에 공정·자율·희망이라는 균형발전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시대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3일 오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인수위 김병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 15대 국정과제의 성공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먼저,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2023~2027년)을 수립·추진해 사업의 실현성을 강화하고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할 방침이다.

5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둔 범정부·지자체 통합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와 연계된 실행계획으로 참여정부 당시 제1차 5개년계획(2003~2007년)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제4차 5개년계획(2018~2022년)까지 이어져 왔다.

이어 균특회계(2022년 10.9조원) 지속 확대 등 15대 국정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지역자율사업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점진적으로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 형식)으로 전환해 분권형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균특회계 투자가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는 등 지역 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폴브라이트 특혜 논란 등 영향인 듯尹, 교육부 장관 후속인사 '과제'

법안카드 부당 사용 논란, 자녀의 폴브라이트 장학금 수령 등 각종 의혹을 받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에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은 교육부 장관 후속 인사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오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던 김인철 후보자는 3월 오전 사퇴의사를 밝혔다.

가족 전원의 폴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논란을 비롯해,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과 정치권의 공세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인철 후보자가 인선 직후부터 각종 의혹



에 휩싸이다가 사퇴 결정을 하면서 새정부 내각 인사 검증 신뢰에 타격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김 후보자 후속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후속 인선 대상자로는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와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최 명예교수는 김 후보자와 함께 검증대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현진 기자 ihj@